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는 지난 8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정부, 건설관련협회, 학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서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제도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업체들이 부실화됨에 따라 2000년 경영평가액 비중을 상향시키도록 기준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과도하게 반영돼 시공경험, 기술력 향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종별로 각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시공능력을 매년 7월말 금액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건설업자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위탁으로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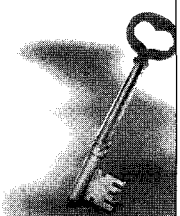
■ 실적 75%·경영 90%로 조정, 경영평가액 반영 상한 설정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은 전체 건설업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금액은 입찰참여나 공동도급 지분결정 등 건설업체의 생존과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많아 단기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초래될 업체 순위 변동,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실적 및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를 발주처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양적·질적 정보만 공시하고 각 발주처가 자기 목적에 맞게 재량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 이후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점차 낮아져(1999년 605.9%에서 2002년 204.6%) 경영상태가 안정됨에 따라 실적 및 기술력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계의 순위 변동, 시공능력평가액의 전반적 감소(특히 중소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문별 반영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실적:경영상태:기술력 반영비율을 60%:100%:20%에서 70%:90%:25%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환산된 시공능력평가 부문별 비중(실적:경영:기술)은 39.1:41.2:12.5에서 45.6:33.5:17.0으로 변화될 것이다.

실적대비 경영평가액이 과다한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실적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영평가액에 대해 상한을 설정토록 한다.

과도한 경영평가액으로 인한 왜곡에 대비해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일반건설 5배, 전문건설 10배)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주력 공종 등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각 부문에 대한 평가액도 공시하도록 한다.

현행은 공시항목 외에 4개 부문별 평가액과 주요 공종별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현재는 시공능력평가액+업종별·전문분야별 공사실적+보유기술자수 공시).

이와 함께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5%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기술자 등급별로 가중치를 주어 기술부문 평가에 반영해 차별화하도록 한다.

이외에 실질자본금 대신 매출액을 사용할 경우 실적평가액과 중복되고 재무안전성 지표로도 미흡하므로 현행 실질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뒤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부문별로 양적·질적 정보만 공시하는 체제로 전환을 검토한다.

개별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는 민간협회 등에서 자기 필요에 맞게 정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도 일본식의 금액이 아닌 점수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업계 및 관련기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에서 기본적 방향을 구체화한 뒤 정부, 관련업계 및 협회, 전문가 등의 면밀한 연구·분석으로 통해 중장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